



즉시 배포용: 2026년 2월 26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미 재무부에 135억 달러의 관세를 뉴욕 주민에게 환급하도록
촉구하는 서한 발송**

Trump의 관세가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 이후 조치

전문가 예상에 따르면 뉴욕 가구의 평균 환급액은 1,751달러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Scott Bessent 미 재무장관에게 서신을 발송해 연방 기관과 즉시 협력하여 뉴욕 주민에게 관세 환급을 시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최근 대법원이 Trump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위법이고 판결한 이후, Hochul 주지사는 관세액 135억 달러 전액을 배상할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Budget Lab at Yale의 추정에 따르면, 평균 뉴욕 가구는 지난해 관세가 시행된 이후 약 1,751의 추가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주 전체적으로 약 135억 달러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서한의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Scott Bessent 귀하
재무장관
미 재무부
1500 Pennsylvania Avenue, N.W.
Washington, D.C. 20220

Bessent 장관님께,

뉴욕 주민 2,000만 명을 대신하여 저는 Trump 행정부에 뉴욕 주민에게 관세 총 135억 달러, 각 뉴욕 가구당 평균 1,751달러를 모두 환급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재무부에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관세 환급 절차를 시행할 수 있도록 즉시 계획을 세우 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난 주, 미 대법원은 Trump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IEEPA)에 따라 부과한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위법한

세금 정책은 미국 경제에 피해를 입혔고 열심히 근로하는 가족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늘어났습니다.

위법하게 미국인과 기업으로부터 수십억 달러의 돈을 빼앗은 연방 정부는 이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돈을 상환해야 합니다. **Budget Lab at Yale**의 추정에 따르면, 평균 뉴욕 가구는 지난해 관세가 시행된 이후 약 **1,751**의 추가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주 전체적으로 약 **135**억 달러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산됩니다.

뉴욕 주민들은 관세가 경제 곳곳에 남긴 피해의 결과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고객들은 일상용품에 더 큰 비용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소상공인의 재료 및 장비 비용 역시 크게 올랐습니다. 우리 뉴욕주의 농업 부문이 특히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농부들은 계획 수립과 미래 투자의 불확실성이라는 위험 요소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뉴욕 주민 수백만 명은 **Trump** 대통령의 무분별하고 위법적인 관세 정책으로 인한 실질적이고 광범위한 피해를 보상받아야 합니다. 뉴욕 주민들은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전액 상환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athy Hochul
주지사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주지사 사무실에 업데이트 신청하기: ny.gov/signup 81336번으로 NEW YORK 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세요

[구독 취소](#)